

민간자금 유입, ESCO사업 활성화 박차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합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 원이 용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_ 박은주 기자(juya3027@naver.com)

'ESCO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대내외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일반인 및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등

ESCO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ESCO사업은 주로 정책자금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어 정책 자금 소진 시에는 사업을 유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저금리에 의



속해진 ESCO업체들이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ESCO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ESCO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도 필요하다.

연구보고서는 민간자금의 활용하여 ESCO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기술적 보안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자금의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증대시키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정부 내 자금을 신규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정책자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규모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자금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자금을 유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존에 민간자금 조달방안은 인식부족, 에너지사용자의 고금리분의 대한 보상기피, 성과보증방식의 낮은 계약률 등으로 쉽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의 원활을 위해 사업계획서상의 수익률이 아닌 실제 운용결과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관리 및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한 방법과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회사가 조합의 형태로 회원사에 보증 및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탄소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의 관련 제도의 보안으로 어떤 것이 제시될 수 있나?

ESCO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투자소재지 기준의 공장생산설비, 건물 기준의 중별 구분방식에서 열, 전기 등 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1종은 열, 전기설비 분야를 포함한 모든 설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2종은 산업 전문분야에 따라 열, 전기로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해당설비 분야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계측장비와 기술적인 요건만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비와 인력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 개인 자산평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등록취소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줄여 ESCO 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SCO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인력양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배경은?

ESCO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에너지 진단능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일부 몇 개의 전문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ESCO업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또한 대학원 위주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교육으로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과정이 유일하다. 따라서 학부생 위주로 에너지진단 교육 프로그램과 업체 재직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자격에 대한 인증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사 교육 등을 인증해주어 자격과 동일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ESCO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나?

사업체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방안 도입의 일환으로 성과보증계약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증계약을 통한 우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소유자금의 100%까지 확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수 ESCO 인증제도의 유효기관을 확대하고 심사 가산점도 확대하여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SCO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고유가에 의한 에너지 절약산업이 국내외적으로 큰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ESCO사업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처럼 민간자금 확대방안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관련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국가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